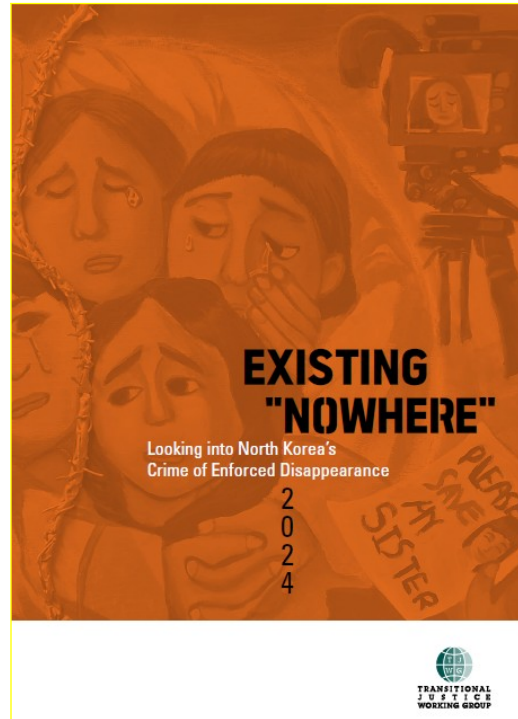


**** 서울/도쿄 시간 2024. 10. 31(목) 오전 10시부터 보도 바랍니다. ****

제네바 시간 2024. 10. 31(목) 오전 2시
뉴욕/워싱턴 시간 2024. 10. 30(수) 오후 9시

“北주민 113 명 강제실종 과정 들여다보니 심증팔구 국가보위성 손아귀서 사라져”

보고서 전문 기사: <https://en.tjwg.org/mapping-project-north-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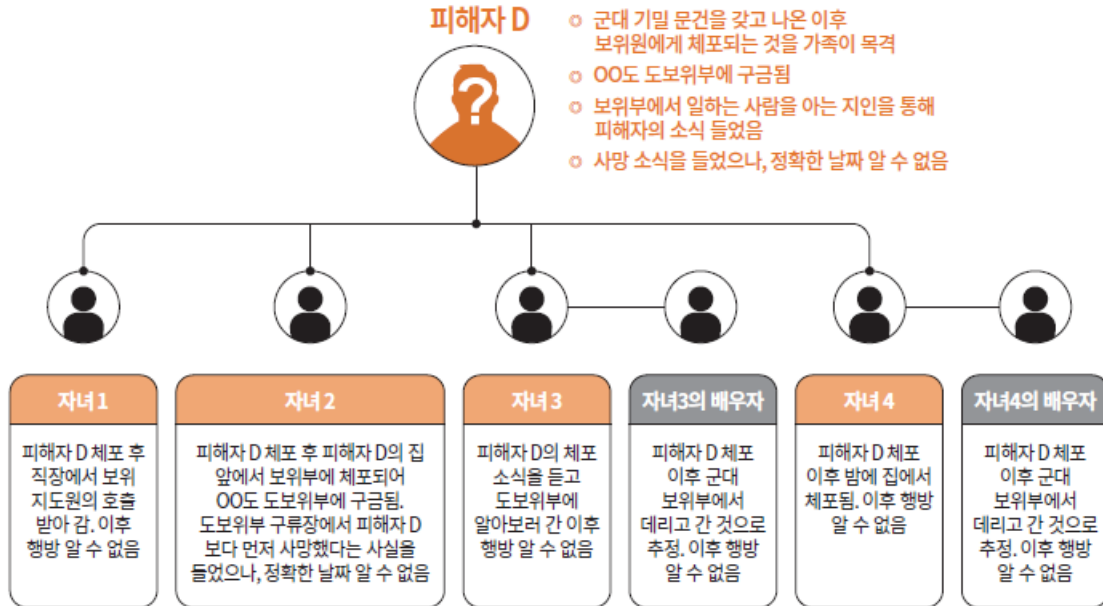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한국시간 10월 31일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Existing “Nowhere”: Looking into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보고서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범죄가 벌어지는 단계와 패턴, 실종된 위치와 지목된 관할기관들을 밝힌다.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하고, 스페인어판을 11월 중 추가 발간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 명을 3년 5개월간(2021년 1월~2024년 5월) 심층면담해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이 실종된 과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지도화(mapping)했다. 중국의 복송 후 이감 경로, 종교활동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 과정, 탈북을 준비하던 주민의 강제실종 과정 등을 지도와 흐름도로 제시하고, 자녀들과 자녀의 배우자들까지 한 일가가 실종된 사건으로 강제실종 가계도까지 작성했다.

사례 4 D씨 일가의 강제실종 가계도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스위스의 휴리독스(HURIDOCs), 납북피해가족단체, 탈북민단체들과 공동구축해 2021년 1월 첫 공개했던 <FOOTPRINTS: 북한에 의한 실종피해자 데이터베이스> (<https://nkfootprints.tjwg.org/ko>)를 업데이트하고, 이번 ‘북한 내 강제실종 조사’로 기록분석한 사례들을 등재했다.¹

북한은 11월 7일(제네바 현지)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결과

- **강제실종된 두 명 중 한 명은 가족이거나 친척:** 강제실종된 사람이 가족/친척인 경우는 113명 중 54명(47.8%)이었다. 27명은 진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였고, 27명은 진술인의 조카, 형부, 시동생 등 친척이었다.
- **강제실종범죄도 3대 세습:** 113명 중 35명(31.0%)은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 사이에 강제실종됐다. 다른 68명은 김정일 정권기에, 7명은 김일성 정권기에, 나머지 3명은 시기 불명으로 기록됐다.

¹ "FOOTPRINTS: Documenting Those Taken by North Korea Online," 2021년 3월 30일, Youtube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d9kuK0c1L0Q>; Edward White and Kang Buseong, "The digital detectives searching for North Korea's disappeared," *Financial Times*, 2021년 5월 15일, <https://www.ft.com/content/c93451fb-676b-4b32-bcba-071b26046264>; "Footprints 2.0 database (North Korea)," 휴리독스, 2024년 6월, <https://huri-docs.org/resource-library/human-rights-research-databases/north-korea-footprints/>

- **체포연행복송 이후 심증팔구 국가보위성 손아귀서 사라져:**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군(조선인민군) 보위국(前 보위사령부), 사회안전성,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순으로 지목됐다. 국가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단독으로 62명을 체포·연행한 기관으로 지목됐다. 체포·연행·복송 이후 실종된 시점의 관할 기관이 어디였는지 파악한 결과, 국가보위성 관할 하에서 실종된 경우가 전체의 81.4%(113명 중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강제실종범죄에 중국과 러시아도 책임:** 북한 내에서는 113명 중 90명(79.6%)이, 해외에서는 23명(20.4%)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체포되면서 실종이 시작됐다.
- **심각한 10세 미만 아동 강제실종:** 강제실종자의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 38.9%(113명 중 4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0~9세)으로 강제실종된 아동은 11.5%(113명 중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탈북 시도(4명), 탈북 준비(3명), 연좌제 처벌(5명)로 끝났고, 1명은 이유가 불명확했다. 강제실종되는 아동들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질의, 명시적 비판, 강력한 행동이 특히 필요하다.
- **중남미 등 국제적 현황에 비해 높은 여성 비율:** 강제실종자의 성별은 남성이 66명(58.4%), 여성이 47명(41.6%)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페루, 남아프리카에서는 강제실종자 현황은 남성 70~94%, 여성 6~30%로 성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북한에 관한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강제실종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점이다. 첫째, 탈북했다가 체포·송환되어 강제실종된 여성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연좌제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인 반체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실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 **강제실종 이유:** 탈북 관련 강제실종(45명, 39.8%)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탈북 후 송환(21명), 탈북 시도(12명), 탈북 준비(7명), 탈북 도움(5명)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연좌제로 인한 강제실종(29명, 25.7%)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한국 등 외부 연락·접촉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10명, 8.8%)이었다. 네 번째는 김정은 일가와 체제 비판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8명, 7.1%)이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6명, 5.3%)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보고서 발간 이유

“기존까지 북한정권의 강제실종범죄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사건 위주로 조명됐고,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저질러온 강제실종범죄는 덜 조명된 불균형이 있었기에 북한 내 강제실종 상황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뒀다. 또한 북한 내 강제실종 사건의 상당수에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국제사회는 탈북 또는 제 3국 망명 희망자를 각국 국가기관이 체포해 강제송환하거나 자국 영토에서 북한 기관원들이 벌이는 납치 활동을 묵인·방조한데서 비롯되는 강제실종을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로 규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_강정현 프로젝트디렉터*

이 보고서는 북한주민들과 탈북민들의 눈물과 좌절감,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다. 강제실종자들은 어디엔가 살아 있고, 어디에선가 망자가 됐을지라도 가족들의 기억과 고통 속에 모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온갖 방법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쫓으려고 한 사람들이 “더 찾지 말라”는 기관원의 짧고 통명스러운 말에서 느꼈던

공포와 좌절감도 보고서에 담고자 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세상 사람들이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좌절감을 이해하며, 문제국가들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늘고 함께해주길 소망했다. *_박송아 조사기록담당관*

국제사회의 추궁과 행동 실현

이 보고서의 성격은 ‘실태보고서’이다. 수 년 간 진행한 조사기록 결과를 종합해 북한의 강제실종범죄 실태를 조망하고 우리가 주목한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한 달 뒤 ‘애드보커시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한다. 북한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그동안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파트너들이 해온 기존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가해자 책임추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권고와 행동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_신희석 애드보커시디렉터*

가해기관과 책임자 식별

체포·연행 단계와 강제실종 단계로 나누어 어떤 기관들이 지목됐는지 제시한 이유는 북한의 현직 수반인 김정은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표적제재 시, 강제실종범죄 책임도 중요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실종 이유들을 짚어보면 김정은 일가의 권력 존속을 위한 체제 유지 목적 아래 강제실종이 벌어져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최대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평양 국가보위성 본부가 중요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므로 관계된 인적구조와 고위간부들의 신상을 밝히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_이승주 프로파일러*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남·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조사기록 단체입니다.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무력분쟁 또는 독재로부터 전환된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현장 접근이 제한된 곳의 인권침해를 조사기록하고 지도로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